

# 文대통령 “3단계 격상 마지막 수단… 불가피 댄 과감 결단”

긴급 중대본 회의… “물리설 곳 없는 비상 상황”  
“3단계 격상 경계 될 고통·피해 상상도 힘들어”  
“감염자 신속히 찾아 고리 끊는 게 근원적 방법”  
“백신과 치료제 사용되기 전까지 마지막 고비”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자 폭증과 관련해 “모든 방역 역량과 행정력을 집중해 코로나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의 모두 발언에서 “실로 엄중하고 비상한 상황이다. 더는 물리설 곳이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국면”이라며 “3단계 격상으로 격계 될 고통과 피해는 상상하기조차 힘들다. 이제 K-방역의

성패를 걸고 총력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우리는 국민과 방역진 의료진 모두 최선을 다해왔고 방역 모범국이라는 세계 평가에 자긍심을 가져왔다”며 “우리가 진정 방역 모범국이라면 이제야말로 그 사실을 증명할 때다. 모두가 힘들고 지쳤지만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하자”라고 독려했다.  
문 대통령 주재의 중대본 회의는 지난 2월 이후 9개월 여만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월23일 코로나19 정부 대책 회의를 주재해 기존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체제의 방역 체계를 국무총리 전담의 중대본 체제로 격상시킨 바 있다. 이

후 총리 주재로 중대본이 운영돼 왔다.  
문 대통령이 중대본 회의를 긴급 주재한 것은 일일 신규 확진자가 사상 첫 1000명대를 넘어선 데 따른 것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030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1000명대 신규 확진자 발생은 지난 1월20일 코로나19 국내 유입 이후 11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방역시스템의 강점을 백분 활용해 단기간에 코로나 확산세를 꺾는 데 집중해주시 바란다”며 “우리의 방역 기술과 방식, 노하우를 최대한 발휘할 때다. 진단 검사, 역학조사 확진자 격리와 치료 등에서 우리가 가진 방역 역량을 최대한 가동한다면 지금의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며 “신속하고 광범위한 검사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감염자를 최대한 신속하게 찾아내고 확산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확산을 빠르게 억제하는 근원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전파 속도를 능가하는 빠른 검사, 선제적인 방역으로 코로나를 단기간에 제압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 민관이 합심해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확보에도 더욱 만전을 기해주시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 의료기관과 기업 등도 병상과 의료진, 생활치료센터 등을 제공해주고 있다. 특별히 감사드리며 더 많은 참여를 요청드린다”며 “정부는 그에 대해 충분히 보상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지치고 힘든 시기”라며 “특히 방역의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계신 당국과 의료진들의 노고와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 혼신에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린다. 백신과 치료제가 사용되기 전까지 마지막 고비다”라며 “그 때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이 가장 강한 백신과 치료제다. 비상한 상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긴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황인 만큼 특히 만남과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주고 일상적인 만남과 활동을 잠시 멈춰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국민의 협조를 바탕으로 단기간에 대응을 집중해 코로나 상황을 빠르게 안정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 김종인 “코로나 대란, 文대통령 판단 오류가 낳은 대재앙”

“K방역 성공 자화자찬한 文정부, 사기성 발언 반복”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관련해 “K방역 성공을 자화자찬한 문재인 정부의 반복된 대국민 사기성 발언이 대통령 무능 때문이든 참모진의 허위 보고 때문이든 이 모든 사태 책임은 문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긴급회의에서 “오늘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 최대치를 기록한 비상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과부화로 일반 응급환자 치료체계에 경고등이 켜 있는 상황”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올해 초부터 충분한 병상을 확보했다고 공언해왔는데 지난 10개월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코로나 전용 병원까지 요청하는 상황에서 기껏 컨테

이너를 병상 대책으로 꺼내 드는 등 지난번 1차 대유행보다 조금도 개선되지 않은 정부의 무능한 대응에 화가 날 지경”이라며 “정부의 실패는 결정적으로 백신 문제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선진국들은 인구수의 수배에 달할 정도의 충분한 백신 확보해놓고 접종을 준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경우 내년 1분기 도입, 2분기 접종 가능할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나 우리나라가 계약한 특정 제약회사는 아직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임상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처럼 백신 확보 실패 등 최근 코로나 대란은 대통령과 정부의 판단 오류와 능동 대책이 낳은 대재앙적 인재가 아닐 수가 없다”며 “백신의 안전성을 고려한다면 백신이 확보한 접종이 시급하지 않다는 정부 당국자의 반복된 입장 결론은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퍼붓고 있다”고 강



김종인 “정부는 의사 국가고시 기회를 부여해 대형병원과 복지 무의존 군부대 등 일선 현장에 의료 공백을 줄여야 할 것”이라며 “병상 확보와 환자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까지 한계 상황임을 고려해 면밀한 실태조사와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발 빠른 지원을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뉴스

## 서동용 의원, 5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주거 안정 보호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우선 분양 전환 자격 대한 분쟁 조정위원회 통해 조정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이 발의한 5년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 전환 자격요건 명시 및 사업자 간 공공임대주택의 매매요건을 강화하여 임차인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년 공공 임대아파트의 경우 일정한 조건을 지켜 5년간 거주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게 되어있다.  
최근 공공 임대아파트를 건설한 건설사와 이들로부터 임대 기간 도중 공공 임대아파트를 매입한 임대사업자가 기존 임대주택 임차인 중 우선 분양자에게 낮은 가격에 분양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임차인의

우선 분양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분쟁 사례가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서동용 국회의원은 이는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우선 분양의 자격 조건을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임대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세입자의 분양 자격을 평가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 시에도 우선 분양 전환 시와 동일한 절차와 분양 가격으로 매각 가격을 산정 △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



각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 의무화 하도록 했다.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여 주택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 가격을 초과한 가격으로 제3자에게 매각할 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2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서 우선 분양 전환 자격에 대한 분쟁 소지가 발생하면 이를 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b>기사제보</b> (062) 222-2580	<b>광고문의</b> (062) 228-2580
----------------------------------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